전형준 화순군수 사의 파장

郡政 방향타 상실… 주민들 자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와 당비대납, 사전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형준 화순군수가 11일 돌연 사의를 표명해 파장이 일고 있다.

구속 당시부터 예고돼왔지만 군정 수장의 궐위로 행정 공백은 불가피해졌고, 화순군은 민선 4기 동안 3명의 군수가 사법처리되거나 중도 하차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재판중 사임 광주·전남 처음

◇**왜 사임했나**=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직 군수가 재판 도중 사임한 것은 지난 1995년 민선자치 시작 이후 광주·전남지역에서 처음이다. 그동안 기소된 단체장들은 대부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버티면서 시간을 벌고 군수직을 유지시켜나게는 게 상례였다.

하지만 전 군수는 11일 제 2차 공판에서 "모든 잘못을 지고 가겠다는 뜻에서 이미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히며 군수직 사퇴를 공식화했다. 그는 이날 오전 공판에 앞서 측근을 통해 사임통지서를 군의회 의장과 집행부 등에 일괄 제출했다.

이날 사의표명은 전 군수측이 이달 말로 예정된 검찰의 구형과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사실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형량을 낮추기 위해 고심끝에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전 군수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네 가지다. 지난 5월 15일 화순모중학교에서 열린 향우회 주최 모임에 참석해 240만원 상당의 수건 800장을 나눠주고, 화순지역 고3 유권자 50여명에게 공짜 식사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또 유권자 2천291명의 당비 2천41만원을 대납했고, 선거운동원에게 승용차 2대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전 군수는 11일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보궐선거**=전 군수가 이날 사임통지서에 적시한 사임일은 오는 18일이다. 지방자치법 제 90조는 이 날짜를 사임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 군수가 해당 사직서를 철회하지 않는 한 오는 18일자로 군수직을 자동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군수 궐위는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당선 무효가 아닌 사임이어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거 사유가 발생하면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 10월 1일~3월 31일까지는 4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재·보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화순군수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25일 신안군수 재선거 해남·진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민주당-무소속 맞대결 될 듯

◇**출마예상자**=화순군수 보궐선거는 지난 5·31 지방선거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소속이던 전 군수와 맞대결을 펼치다 1만여표차로 낙선한 무소속의 이영남 전 군수가 후보군에 가장 먼저 꼽힌다.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내 공천 경쟁을 펼쳤던 5명의 입지자도 예비후보군 물망에 오르내린다. 배동기 전 화순부군수와 양경수 화순축협조합장, 임호환 전 농업기반공사 전남본부장, 정완기 전 전남도의원, 최영호 전 전남도의원 등이 그들이다. 여기에 전형준 군수의 동생이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민선후 군수 3명 사법처리·중도하차

◇**화순지역 분위기**=지난달 18일 전 군수가 구속 기소된 직후부터 화순군정은 최창원 부군수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최 부군수는 10·25 신안군수 재선거에 후보로 나서기 위해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 당 공특위에 의해 최종 후보 심사대상에 올라있다. 전 군수의 사임으로 민선 4기 군정방향도 수정이 불가피해졌으며, 행정혼선과 공백도 우려되고 있다.

벌써부터 군의회 의정활동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군의회는 다음달 18일~26일 정례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보궐선거(25일)가 예상됨에 따라 회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11일 오전 10시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김 실 군의회 의장은 "선거만 치르고 나면 반복되는 군수 궐위사태에 참담하고 착잡한 심정"이라며 "이에 대한 자탄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전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화순=조성수기자 css@

야 3당, 대통령 사과·법사위 청문회 요구

헌재소장 임명안 14일 처리 사실상 무산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14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비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회동을 갖고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 문제와 관련, ▲법사위 차원의 인사청문회 개최를 통한 적법성 시비 극복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사태의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노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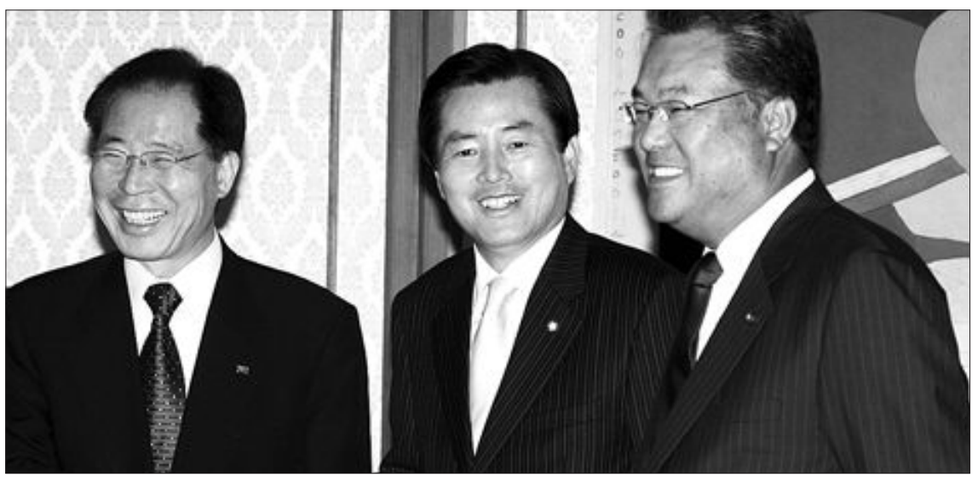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회동 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사태를 초래한 1차적 책임은 노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으며 국회의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진행해 혼선이 생기는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없는 한 임명동의안 처리는 안 되며 여기에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불가하다는 점을 포함한다"며 "국회의장은 법사위에 (별도로) 임명동의안을 회부해서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논의 토록 하라는데 야 3당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야 3당이 전 후보자에 대한 법사위 청문회 회부를 중재안으로 제시함에 따라 사실상 14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전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이 야 3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사위 청문회 절차를 거친다면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빨라야 오는 19일 본회의에서나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있는 만큼 이병완 비서실장이 노 대통령의 사과의 뜻을 국회에 전달하면 될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한발씩 양보하면 이번 문제가 쉽게 풀려갈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주당 김효석,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왼쪽부터) 등 비교섭단체 야 3당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귀빈식당에서 전효숙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준안 처리 논란에 대한 공통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회담을 하기 전 담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힐 "북 6자회담 복귀땐 양자회담"

"6자회담 대체할 회담없어"

미국측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1일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만큼의 양자대화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1박2일의 방한일정을 위해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한 뒤 "미국은 언제든 9.19공동성명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이 내일 당장 회담장에 돌아오더라도 '어디 갔다 왔느냐'고 묻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6자회담 참가국 중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된다는데 동의하고 있으며 (미사일 발사 후)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을 위해 이전보다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힐 차관보는 이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문에 대해 모든 나라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는 결의문을 지지하는 입장이며 이번에 한국 측 파트너의 의견을 들어본 뒤 워싱턴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6자회담 이외의 다자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6자회담을 대체할 회담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면서 "새로운 회담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것은 6자회담의 끝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임대 아파트 보증금 보호는 사회적 과제"

與 서갑원의원 특별법 추진
"임차인 대부분 저소득층"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임차인들이 평생 모아온 임대 보증금을 뜯기게 되는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순천·사진)이 공공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섰다.

서갑원 의원은 11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의실에서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 입법에 나설 예정이다.

서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 주요 내용은 2005년 7월 이전 공급된 공공임대아파트의 부도 발생시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임차인들의 주거 보호를 위해 임대 보증금이 전액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공공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은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라며 "이들의 임대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상납 여전…

지방의원·기초단체장으로부터 여야의원 21명 고액 후원금 받아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난 5.31 지방선거를 전후로 지방의회 의원 또는 기초단체장으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06년 상반기 고액기부자(120만원 이상) 현황'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의 김동철, 신중식 의원을 비롯 총 21명(열린우리당 3명, 한나라당 16명, 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의 의원들이 올 1~6월 지방의회 의원 및 구청장으로부터 150만원에서 400만원의 고액 후원금을 받았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송병태 전 광산구청장으로부터 4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주당 신중식 의원은 두 명의 군의원으로부터 각각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한편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단체장 후보 66명에게 연 120만원 이상의 고액을 후원한 사람 가운데 인적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35.1%인 5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한나라 지역화합특위 광주 亞문화수도 점검

특위 위원 7명 來光

한나라당 지역화합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정의화 의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점검하기 위해 12일 광주를 방문한다.

정 위원장 등 특위 위원 7명은 이날 오후 3시 광주시청에서 박광태 광주시장으로부터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아시아문화전당 터를 둘러볼 계획이다.

위원들은 또 오후 5시에는 광주 비엔날레를 관람하고 광주NGO 대표들과 만찬간담회를 가진 뒤 상경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